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벌써 목련 나무는 봄을 품고 있다. 자연은 추운 겨울에도 무엇인가를 키우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잘 것 없이 초라하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자신의 책임 앞에서서는 꼬리에 불붙은 망아지처럼 쫓꾸니 뺄는 모습을 보노라니 기차 찰 노릇이다.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우리 삶의 과정에는 행복과 불행이 한 침대에 누워 힘을 겨룬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놓여올 때 그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성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순식간에 사라질 인거나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행복은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며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 상태를 말한다. 행복에는 기쁨, 환희, 희열, 황홀감, 사랑과 같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극, 도전, 불행, 후회도 껴안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 달라이라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이 행복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올바로 잡힌 사물의 질서에 대한 인식’, ‘군공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사회나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는 상태’, ‘마음의 평화’가

나답게 크는 아이

행복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행복은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활필수품임을 알 수 있다.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슨은 행복은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상태’, ‘활기넘치는 생활’, ‘인생에서 가치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태는 무엇일까? 자녀들의 아픔이 아닐까 싶다. 며칠 전 부모로부터 버려져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은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 청소년은 지적장애, ADHD, 반응성 애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발달장애로 인한 다양한 비행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특하면 학교에서 교사에게 대들고 교칙을 위반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여 그 요구가 거절되거나 욕구가 좌절되면 자신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출뎀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수용하기 힘든 사건을 벌이고 다녔다.

최근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장애는 공존질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ADHD로 진단받은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학습장애 증상을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 중 최근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 영역 중 한 가지가 지능과 관련한 장애이다. 특히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이다. 경계성 지능장애아동은 지적장애는 아니나 IQ가 84~70에 이르는 아동을 일컫는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아동 중 13.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성지능장애 아동은 몇가지 어려움을 보인다. 이들은 또래관계의 어려움, 혼자 씹거나 정리를 하는 자조능력의 부족, 감정조절의 곤란. 우울감이나 열등감 같은 정서문제, 학습의 어려움, 사회성의 부족, 부적응적 성격 특성을 보이기 쉽다.

한 개인의 인지능력은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이다. 따라서 지능은 경험을 통한 학습역량, 문제해결능력, 기억력, 창의력 같은 고등정신기능, 한 개인이 획득한 총지식,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계성 지능아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는 안된다.

경계성지능아동을 돕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계성지능 아동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40여곳에 전문가를 훈련시켜 파견하고 있다.

파견전문가들은 경계성지능아동의 특성과 학습지도, 사회성 증진, 심리상담, 부모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와 수퍼비전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계성 지능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파견전문가, 부모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각자의 색깔대로 커 나가기를 바란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비교, 낙인과 차별. 배제에서 오는 불행감이 아니라 자신의 색깔과 장점을 존중받는 행복감이다.

기고

김정욱

(사)한국스포츠포트니스협회 이사장



피트니스 산업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트레이너, 필라테스·바레(Barre)·요가 강사는 이제 낯선 직업이 아니다. 아이들의 체형 관리부터 중·장년층의 건강 유지, 재활과 생활 운동까지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영향력이 커진 산업과 달리,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피트니스 지도자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돼 있다. 트레이너에게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현장에서 일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필라테스, 바레, 요가 역시 마찬가지다.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는 구조 속에서 피트니스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고, 그 팽창은 곧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본격화된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설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무분별한 장업을 낳는다. 헬스장은 빠르게 늘어나고, 가격 경쟁은 파괴적으로 흐르며, 시장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수의 구조가 무너지면 장기 이용권 선풍매, 과도한 영업, 무리한 확장이 반복되고, 그 끝에는 소비자 피해와 이

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부재한 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재 헬스장만이 구경 체육관광과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헬스장 개설 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실제 운영자와 무관하게 ‘돌려쓰는’ 관행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관리주체인 행정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민간 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반면 필라테스, 요가, 바레 시설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즉, 개설 기준도, 지도자 자격 요건도, 관리 체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피트니스 영역임에도 어떤 시설은 관리 대상이고, 어떤 시설은 완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방치돼 온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국가자격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장의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자격증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이 민간 자격증의 비용과 신뢰도에 극심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자격 과정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저렴한 과정도 존재한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렴한 자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의 차이가 강사의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 실력과 경험이 있어도 자

격의 ‘가짜’ 때문에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자격 체계는 결국 현장에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뿐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례가 있다. 미용사는 국가자격이 없으면 애초에 현장에 설 수 없다.

그 결과 직업의 기준이 명확하고, 책임과 신뢰가 제도로 뒷받침된다. 인체를 직접 다루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피트니스가 오히려 더 느슨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제는 피트니스 지도자를 ‘열려 있는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관리, 사회적 신뢰를 보장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사단법인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의 관리와 검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흙어진 자격과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피트니스 산업 전반에 기준과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피트니스는 이미 전문 영역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예타와 함께 부지 확보 일정도 맞물려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103.4만㎡ 규모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상에 앞선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까지 정지공사를 마쳐 연구시설 건립에 바로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예타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준비를 병행하는 구조다.

전남도는 관련 기업 300여개 유치,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건설 단계의 지역 경기 효과와 운영 이후 연간 2000명 이상 연구 인력 유입도 예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망은 예타 결과를 전제로 한다. 통과 이후에도 설계, 인허가, 시공 등 단계별 일정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전남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예타 대응과 부지조성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때 비로소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지역 산업 전략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때 비로소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지역 산업 전략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연구시설은 예타 문턱을 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기술적 필요성과 경제성, 국가 전략과의 연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사업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다. 예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전남도는 오는 8월 최종 통과는 목표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있다. 핵융합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분류되지만, 연구시설 구축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적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것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일은 다르다. 국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사설

지역 경제단체, 중소기업 지원책 결실맺길

‘설’ 명절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이달 말 국회 통과 예정인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또 하나의 커다란 지역 이슈였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구체적인 청사진 등이 없는 특별법 탓도 있지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광주·전남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극심한 복합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증가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업소득 감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 환경속에 상가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다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들도 미국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이에 지역 대표 경제단체들이 올 한해 기업의 피해 최소화화 and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장려금을 지원 하는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추진해 250명에게 고용을 지원하며 이직을 완화와 인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내일센터’ 운영과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자금난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8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고 광주·전남테크노파크는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청년 취업기회 제공 등 현장 밀착형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82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통해 골목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로 했고 전남신용보증재단도 올해 신규보증을 5500억원 규모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들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광주 청년 ‘괜찮은 일자리’ 있으면 안떠난다

지역 청년층의 ‘탈 광주 현상’이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광주는 지난해 1만4000명의 순유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순유출률을 보였는데 이 중 57%인 8000명(20대 5200명, 30대 2800명)이 청년층이었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고용시장 협소, 수도권 집중의 교육·연구·문화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일경험·금융상담 등 지원이 있어도 실제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즉, 정책과 청년의 체감 불일치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한 속마음(?)과 이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에 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는 지역 대학생·청년 307명과 지역 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대다수는 지역 정주 핵심조건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4000만원대 초임을 꼽았다.

실제로 73.9%의 응답자는 ‘광주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희망초임 연봉으로 절반 가까이(44.6%)가 4000만원 이상을 기대했다. 또 지역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많은 46.6%가 ‘전공 관련 일자리 부족’을, 이어 18.9%가 ‘낮은 급여 수준’으로 대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54.6%는 신입 초임으로 3000만~3500만원대를 제시해 청년들의 기대수준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들은 또 인재 확보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46.3%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원자의 직무 역량 미흡’을 들었고 신입 채용 시에는 전공·기술 자격과 실무 경험을 중시하며 소통·협업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원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청년층의 이탈이 단순 일자리 부족이 아닌 전공 적합성과 임금 기대치의 구조적 불일치에 있다는 것을 이들의 대답을 통해 실질적으로 알아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해답도 제시됐는데 이는 한마디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www.GwangNam.co.kr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 차재진 | 사 경리인  |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장 최현수  |
|---|----------|-----|--|-----|--------|--|
|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     | 정 치 부 370-7040<br>경 제 부 370-7020<br>산 업 부 370-7010<br>사 회 부 370-7030<br>문화체육부 370-7234<br>문 진 부 370-7082<br>사 진 부 370-7050 |     |        | 는 설 실 370-7200<br>임 월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고 국 370-7070<br>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978-7090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     |  |     |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     |        |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          |     |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br>이메일 gndn2018@naver.com  |     |        |  |